

보도일시 (인터넷) 2023. 9. 10.(일) 11:00,
(지면) 2023. 9. 11.(월) 조간

배포 2023. 9. 8.(금) 오후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지자체에 이양, 지방항만 자치 시대 열린다

- 지방관리항 사무 이관의 후속 조치로 지방항만 정책 자율성 및 책임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한다. 이는 「지방 일괄이양법」 시행(2021. 1. 1.)으로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간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되어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예산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방항만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용료 이관 결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은 경남이 약 1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강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세입 이관 결정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정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에 맞는 항만개발·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출입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인 만큼, 효율적·안정적인 항만 운영과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관리항만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책임자	과 장	최종욱 (044-200-5770)
		담당자	사무관	최지명 (044-200-5791)

시도별	항만 현황	비고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15개 ○ (연안항) 16개 	31개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서울항 ○ (연안항) - 	1개
부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 ○ (연안항) 부산남항 	1개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속초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 ○ (연안항) 주문진항 	5개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보령항, 태안항 ○ (연안항) 대천항, 마량진항 	4개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완도항 ○ (연안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강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9개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 ○ (연안항) 구룡포항, 강구항 	2개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진해항, 하동항 ○ (연안항) 진촌항, 중화항 	9개

※ 지방관리무역항 중 제주항·서귀포항, 지방관리연안항 중 애월항·한림항·성산포항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전부터 「제주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로 수입 귀속